

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농정현안 간담회 결과

1. 목적

- 농자재 가격상승 등 경영비 급등과 농업소득 감소에 따라 농업·농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축산단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여 당 차원의 농정 대책을 추진

2. 일시 및 장소 : 2023. 6. 7(수), 14:00~16:00, 서울시 서초동 축산회관

3. 참석자 :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(위원장 이원택 의원 및 운영위원 10명) 및 한국농축산연합회 단체장 등 35명

* (사)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: 강용 회장 참석

4. 간담회 결과

- 농식품법인연합회에서는 2차 이사회('23.6.1)에서 의견 수렴한 현안 사항 6개 사안 공식 건의(붙임 참조)

- 공식 건의 외에 2개 사안 추가 건의

- 최근 양파 등 농산물 가격폭등이란 언론 기사에 대해 평년가격*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전년과 비교하여 농축산물 가격폭등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물가 상승의 원인이 농산물인 것처럼 보도하는 통계청과 언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

* 평년가격 : 5개년 가격 중 최고 최저 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 가격

- 농민단체와의 의견 수렴시 현안별 애로사항 파악도 중요하나, 민주당은 농업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건지 당 차원에서 농업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해 줄 것을 건의

⇒ 건의 사항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안 신설을 검토하고 기타 사항은 당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해 나가겠다고 약속.

건의 내용 및 답변내용

건의 내용	답변 내용
<p>1. 농축산용 전기료 인하</p> <p>○ 농축산물 가격폭락 속에 전기료, 인건비 등 농업생산비 상승으로 생산·공급에 차질이 생겨 수급불안과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감소로 농가경영 애로 가중</p> <p>⇒ 농가 경영안정 및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해 농축산용 전기료 인하 필요</p>	<p>○ 농업용 전기료 인하 문제는 농해수위뿐만 아니라 정부, 국회 산자위원회와도 협조가 되어야 할 사안으로 관심을 갖고 처리</p> <p>* 농축산연합회 공동 제안 안건으로 처리</p>
<p>2. 농업법인 대표자도 실경작하는 경우 자경 인정</p> <p>○ 농업법인의 임직원으로 급여가 연간 3,700만원 이상인 경우, 법인 소유의 토지와 개인소유의 토지를 활용하여 농업생산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자경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개인 영농에 대한 세제상 불이익 발생</p> <p>⇒ 개인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실제 농업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농업법인 대표도 자경으로 인정해 줄 필요 (법인영농과 개인영농을 동시에 수행 가능하도록 제도개선)</p>	<p>○ 법인대표자의 실경작 인정 여부는 입법이 필요한 사안으로 적극 검토</p>
<p>3.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 확대</p> <p>○ 농업법인에 대한 사업범위를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여 고가의 유희 시설·장비를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사례 발생</p> <p>* 가공·보관 시설 등은 농산물 수확량에 따라 가동 일수가 제한적으로 연중 활용이 곤란함에도 타 사업을 할 수 없어 방치하는 상황</p> <p>⇒ 사업기회를 확대하고 법인의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적사업 이외에 부대사업(임대사업 등)을 추가할 필요</p>	<p>○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는 상황을 파악하고 적극 검토</p>

건의 내용	답변 내용
<p>4. 농축산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대상 품목 확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농축산물의 생산·가공·선별·보관·단순가공 상품화 등 작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비 구입이 필수이나,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은 품목이 많아 경영비와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며, 부가세는 농업의 평균 소득율을 훨씬 초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⇒ 단순가공을 위해 필요한 기자재(포장재, 농산물 절단기 등)는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 필요 ○ 정부의 영농규모화 정책에 따라 법인의 규모가 확대되어 트랙터로 할 수 없는 농작업의 경우 불도저 같은 중장비가 필요함에도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어서 농가 부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일본의 경우 농장에서 사용하는 중장비의 경우 번호판 없이 사용하고, 면허세 면제, 정기검사 불필요 ⇒ 농작업용 중장비 등은 부가세 환급 대상에 포함 요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부가세 환급 대상 품목 확대는 긍정적으로 검토 ○ 중장비의 부가세 환급 대상 포함은 처음 건의한 내용 이므로 검토 후 처리
<p>5. 가업승계 문제 개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업승계 대상 업종에 시설재배업 등 포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농업 중 작물재배업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제외한 업종이 가업승계대상 업종에 미포함 - 시설작물재배업과 축산업이 기업화되고 있으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상속시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함 - 자녀의 승계가 불가능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기업을 매각하여야 하는 문제 발생 ⇒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축산업과 농업시설재배업 등이 포함되도록 관련법 개정 필요 ○ 영농 가업상속 공제액 확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기업의 가업상속공제는 600억원으로 최고 한도가 늘어난 반면, 영농 상속공제는 3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농업법인에 대한 차별 ⇒ 영농규모화로 농업법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상속공제액도 확대할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가업승계 문제는 민주당 내에서도 논의 중인 사안으로 여러 이견이 있으나, 타당성이 있다는 의원들이 많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처리 ○ 영농상속 공제액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 검토 하겠음(입법 필요)
<p>6. 고기 1인분 기준 설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역, 식당마다 고기 1인분 기준이 약 120~200g 내외로 모두 달라 소비자 불만 ⇒ 정부가 객관적으로 1인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검토 후 필요시 입법 추진

<사진 자료>

